

7/ 아베 시대의 대전환:

자민당 지배 공고화를 통해 탈전후하는 일본*

박철희



아베 신조 전 총리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hinzo_Abe_meeting_with_Putin.jpg?uselang=ja

박철희(朴喆熙)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일본연구소장, 현대일본학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에 『代議士のつくられ方』(2000),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2011),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공저, 20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공저, 2016), 『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공저, 2018)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1.25.180>

1. 서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2년 12월 26일 재등판하여 2019년 9월 16일 수상직을 사임하기까지 7년 9개월간 총리직에 머물렀다. 2006~2007년 사이 총리로 재직한 1년을 합치면 8년 9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총리직 재임자였다.¹

아베 총리의 재임 시절이 주목되는 것은 단지 그의 최장수 총리 재임일 수만은 아니다. 우선, 아베 총리는 2009년 민주당에 넘겨주었던 권력을 자민당으로 되찾아왔다. 3년 3개월에 걸친 야당 생활 끝에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은 권력을 다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5번에 걸친 국정선거에서 모두 연승함으로써 자민당 일당우위체제(one party predominance)를 복원했다. 1955년 체제하에서 자민당 일당우위체제를 38년간이나 유지했던 자민당이 1993년 자민당의 분열로 인해 일시적으로 야당에게 내줬던 권력을 다시 찾아왔지만, 자민당의 활력이 야당을 압도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민주당으로 통합된 야당 세력이 자민당 권력에 도전하면서 급기야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고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완패하면서 자민당은 권좌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으로 보였다. 일본이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two party system)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베 시대의 7년 9개월 동안 자민당은 모든 국정 선거에서 야당을 압도했다.² 양당체제로 향하던 일본 정치가 1955년 체제와 유사한 1.5당 체제로 다시 돌아온 것이 일본 정치의 현주소다.

둘째, 아베 시대는 총리 재임의 안정화를 이루었다. 아베가 재등단하기 이전 총리들은 자민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수상이

1 아베 총리는 전전 일본을 포함하여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연속 재임 2,822일, 통산재임 3,188일이었다. 2위는 가쓰라 다로(桂太郎)로 2,886일, 3위는 사토 에이사쿠(佐藤 栄作)로 2,798일이다.

2 아베 총리는 다섯 번의 국정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2013년 7월 21일 참의원 선거, 2014년 12월 14일 중의원 선거, 2016년 7월 10일 참의원 선거, 2017년 10월 22일 중의원 선거, 2019년 7월 28일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바뀌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이 5년 반을 집권한 이후 자민당에서는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郎)가 모두 1년 남짓한 총리직을 수행했고, 민주당 정권이 되어서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 나오토(菅直人),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모두 1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다. 이른바 ‘총리 수난시대’였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벗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명예를 얻으면서 일본의 총리가 단명 정권으로 끝나는 일상적 패턴의 반복에 종지부를 찍었다.

셋째, 아베는 권력의 집중화, 특히 총리관저가 주도하는 정책 결정구조를 현실화시켰다. 전전(戰前) 시스템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출발한 1955년 체제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분권화한 시스템이었다. 울퍼렌(Wolferen)이 권력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데도 결정이 이루어지는 ‘권력의 수수께끼’가 일본 정치의 비밀이라고 비아냥거렸을 정도였다.³ 1990년대 정치개혁을 추진하면서 총리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를 제외하면 제도화된 권력을 총리관저로 집중시킨 총리는 없었다. 분권화된 정치권력 체제에 커다란 변혁을 주고 총리가 집권적으로 정책 결정을 주도한 것은 아베 시대 특징의 하나다.⁴

본 논문은 아베 시대의 일본 정치가 자민당 우위체제의 복원, 총리 재임의 안정화, 그리고 총리관저로의 권력 집중화를 통해 자민당 지배체제의 공고화라는 정치과정의 특징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아베 총리가 이루어 내고자 했던 정치적 지향성은 무엇이었나를 밝히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아베 총리가 이루고자 했던 일본 국가전략 정체성의 재확립이 어떠한 바탕 위에서 추진되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필자는 아베 시대 자민당 지배의 공고화를 바탕으로 아베가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의 핵심은 ‘탈전후’(脫戰後) 또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3 Karel Van Wolferen,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New York: A.A. Knopf, 1989.

4 이주경, 「관저주도의 신보수화 개혁정치」, 박철희 엮음, 『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35~70쪽.

이었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55년 체제하에서 보수본류 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던 ‘요시다 노선’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하는 것이 아베 정치의 원점에 있었다.⁵ 아베는 ‘탈전후하는 일본’을 만들고자 했고, 요시다 노선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는 ‘근본적인 변혁’(radical shift)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논지다.

하지만, 아베 시대 자민당 지배체제 공고화에 기반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 아베의 돌연변이적인 개인적 자질의 결과라거나 일시적인 강권 정치의 압박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베 시대에 이루어진 ‘탈전후’의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 ‘잃어버린 20년’(失われた20年)이라고 불리는 대변혁기를 거쳐 진행된 ‘전후체제의 변용’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연속성을 가진 것이었다. 일본의 일각에서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르며 자조적으로 실패의 기간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은 그 기간이 대변혁기였다고 주장한다.⁶ 연속성 및 경로의존성과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점은 민주당(民主党) 정권이 지향하던 정책 방향에 대한 급격한 보수의 반동(conservative backlash)이 일어나 ‘탈전후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아베 시대의 등장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5 보수본류에 대한 논리 전개는 Michio Muramatsu & Ellis Krauss, “The Conservative Policy Line and the Development of Patterned Pluralism,” in Kozo Yamamura & Yasukichi Yasuba,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 1 The Domestic Transform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516~554.

6 필자는 ‘헤이세이시대’(平成時代)가 패배와 체념의 시기였다는 자조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진다. 1990년대가 대변혁기였다는 논지에 대해서는 Cheol Hee Park, “Political Dynamics of Regime Transformation in the 1990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4. 헤이세이시대가 실패와 체념의 시기였다는 논조는 吉見俊哉, 『平成時代』, 岩波書店, 2019 참조.

2.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대변혁기:

전후체제의 변용

아베 시대에 이루어진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시도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타난 전후체제 변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일본 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20년을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되었지만 시스템을 개혁할 기회를 상실하고 추락을 막지 못한 실패의 시기로 간주하고,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1955년 체제하에서 구가했던 정치적 안정, 경제 성장, 사회적 평등이라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밖에서 본 1990년대, 2000년대의 일본은 1955년 체제하에서 정착되었던 전후체제의 기둥들이 복합적으로 재구성되어 가는 대변환기였다.

1) 국내 ‘미니 냉전’의 종결과 정계 재편: 보통국가론의 등장

가장 먼저 정치적 변화가 눈에 띈다. 일본정치가 냉전 종식이라는 대외적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투과 없이 국내 정치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냉전 직후 발발한 걸프전에 대한 공헌을 둘러싼 논쟁은 일본 국내에서의 ‘미니 냉전’에 종결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걸프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었던 일본은 미국의 재정적 공헌 요구를 받아들여 130억 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하고도 국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고, 그 연장선에서 국내 ‘미니 냉전’의 구도가 급변했다.

자위대의 국제평화 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에 찬성하는 자민당, 공명당, 민사당의 협력, 즉 자공민(自公民) 노선이 구체화되어 후일 신진당의 모태가 형성되었는가 하면, 자위대 파견에 끝까지 반대한 사회당은 ‘일국평화주의’ 고수라는 비판 속에서 정치적 외톨이로 전락하면서 급속한 하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당시 자민당의 실력자였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국가노선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고자 했다.⁷ 일본도 경제력과 부의 축적에 상응하는 정치외교적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보통국가론의 주장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전통적 보수분류 노선인 요시다 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 중도(保守中道), 호헌과 평화의 구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보수 리버럴(保守リベラル)에 더해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론을 주창하는 보수 우파(保守右派)도 나타났고,⁸ 민족자존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보수(新保守)의 목소리도 높아 간 것이 1990년대 초 일본 자민당의 새로운 모습이었다.⁹ 혁신 정당의 몰락, 중도 정당들의 전향, 보수 우파의 전진이 1990년대를 특징짓는 일본 정치의 흐름이었다.

다케시타파(竹下派)의 분열로 권력에서 일시 밀려난 자민당이 사회당, 사키가케와 손을 잡고 정권을 되찾아 옴으로써 1990년대 대부분의 기간 보수 중도와 보수 리버럴의 목소리가 큰 ‘리버럴 모멘트’(Liberal Moment)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사회당이 몰락한 이후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합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면서 자사사(自社さ) 연합파였던 보수 중도들은 힘을 잃고 보수 우파들의 목소리가 확대되었다.¹⁰ 2000년 모리 요시로(森喜朗) 수상의 등장 이후 ‘세이와카이’(清和会)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자민당 총재가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로 이어진 것은 당내에서 보수우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간과 일치했다. 동시에 이 기간은 원외에서 1997년 결성된 일본회의(日本会議)의 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들은 천황제 중시, 개헌, 영토 역사에 대한 인식 증대, 일본의 자연 역사 전통 문화 등 ‘아름다운 일본’(美しい日本)의 계승 발전을 내세우며 자민당 보수우파들의 외부 지원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7 小沢一郎, 『日本改造計画』, 講談社, 1993.

8 若宮啓文, 『戦後保守アジア観』, 朝日新聞社, 1995.

9 박철희, 「일본 정계에서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성장과 한국에의 함의」, 김영작·전진호 엮음,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 한국에의 함의』, 한울 아카데미, 2006, 90~111쪽.

10 박철희, 『자민당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 경제침체 속의 정치 주도 개혁: 분권형 정치로부터 집권형 정치로

정치 주도 세력이 바뀌는 것과 동시 진행된 것은 정치제도 개혁이었다. 정치제도의 개혁은 본래 정치적 부패가 드러나자 돈이 많이 드는 정치를 개선하자는 취지하에서 자민당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개혁이 시발점이었다. 파벌 간 경쟁으로 대표되는 분권적 당내 경쟁을 줄여서 당 총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 간 정책 경쟁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¹¹ 비록 비례대표제와 병립제를 채택하기는 했지만, 소선거구제 도입의 명분은 파벌, 후원회, 족의원 등으로 여러 곳에 분산된 정책결정의 중심을 당의 대표와 총재 중심체제로 일원화하고,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정당 중심의 정책 경쟁을 강화시키자는 취지였다. 선거제도 개혁이 본래 의도했던 결과를 산출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적어도 한 선거구에서 같은 정당의 후보가 사활을 건 경쟁을 하는 구조를 약화시켰고, 파벌의 공천개입 여지를 줄이는 동시에, 중앙당의 정책 집중성을 강조하는 체제로 제도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었다.

당대표를 파벌 간 합종연횡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를 반영하는 형태로 선출되는 계기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능해졌다. 아울러, 소수 정당들의 입지가 어려워져 정당들 간 이합집산 및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정당 간 통합을 재촉했다. 긴 안목으로 보자면, 파벌, 후원회, 소수 정당들에게 나누어져 있던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 점차 당대표와 총재, 총리로 옮겨가는 집권형 정치로의 초석이 만들어진 것이 1990년대 이후 20여 년 간에 이루어진 변화였다.¹²

다른 한편, 버블 경제가 종식되고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1955년 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던, 관료에 의존한 국가주도형 경제성장노선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정치권은 경제사회 개혁을 빠르게 입안하고 실

11 佐々木毅, 『政治はどこへ向かうか』, 中公新書, 1992.

12 伊藤光利, 「官邸主導型政策決定と自民党」, 『Leviathan』 38号(2006年春), 7~40쪽.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료적 저항을 줄이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관료들의 조직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한 개입의 여지를 줄여 가면서,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총리관저가 조정하는 권력집중형 개혁이 행정제도 개혁과 이해조정 제도개혁에도 반영되었다.¹³ 관료들의 군용할거를 줄이기 위한 성청의 합병, 그리고 분절화된 정책 결정 구조하에서 관료들이 독점했던 정책 조정 우선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무차관회의의 폐지, 부대신 및 정무관의 숫자와 기능을 늘려 가는 개혁으로 이어졌다. 또한, 관저의 정책 주도 기능을 높이기 위해 관방장관실과 내각부 기능을 강화하고, 내각인사국을 만들어 고위급 관료들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내각법제국의 기능을 활용하여 여당 사전심사제의 역할은 줄이고 총리관저의 입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었다.¹⁴

이와 같은 제반 정치, 행정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당 하부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고 당 중앙집행부의 힘을 늘리는 한편, 관료들의 단계별 정책 수립 기능을 줄이면서 정치인, 특히 총리의 관료 통할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20여 년에 걸쳐 도입되었다. 아베 시대 총리관저 주도형 정치행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3) 조직/공동체형 사회로부터 무당파 유동층 증대: 개혁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1990년대에 나타난 사회적 변화의 큰 부분은 종적/서열적 사회적 네트워킹에 기반한 공동체적 조직들의 붕괴에 있었다.¹⁵ 장기거주자들에 기반을 둔 ‘조나이카이’(町内会)는 급속하게 진전된 고령화, 저출산의 영향과 더불어 교외로부터 장거리 출퇴근하는 인구의 증대로 낮 시간에 지역공동체에 거주하는 인구의 저하로 연결되었다. 연장자를 중심으로 종적 네트워크에 편입된 인구의 감소를 의미했다. 또한 아파트와 맨션을 중심으로 한 거주형태가

13 飯尾潤, 『日本の統治構造』, 中央公論新書, 2008.

14 박지선, 「아베 정부하 당정 관계의 권력 집중화: 총재직속기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25호, 2021, 42~65쪽.

15 일본사회를 종적 네트워크 사회로 본 것은 中根千枝, 『タテ社会の人間関係』, 講談社現代新書, 2013.

일반화되면서 이른바 ‘옆집에 사는 타인’(隣の他人)이 일상화되었다. 아울러 생활패턴의 변화로 대형 슈퍼마켓과 역전 부근의 마트, 그리고 24시간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점 중심의 상권 변화로 인해 지역에 뿌리를 둔 상점회(商店会)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급격히 와해되었다.¹⁶

경제 전반으로 보자면, 중후장대형 산업을 중심으로 하던 경제성장이 혁신형, 가격과괴형 혁신기업들의 등장으로 전통적 대기업을 핵심으로 하는 경단련(経団連) 등 산업조직체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다. 산업 현장에서도 경제 침체와 저성장 구조의 정착에 따라 정규직 외에 시간제, 계약직, 유연 근무 등에 기반한 비정규직들이 늘어나면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주의에 기반을 둔 기업 내 종적 네트워크도 약화되어 갔고, 정규직을 기반으로 한 기업 내 노동조합의 조직율도 저하되어 갔다. 이는 역으로 보면, 평생직장에 기반을 둔 연공형 보상체계가 무너지고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에 기반을 둔 계층 간 평형화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을 의미했다.

종적 사회 네트워크의 전반적 이완은 정치적으로는 조직 네트워크에서 빗겨나 있는 무당파, 유동층, ‘스윙 보터’(swing voter)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¹⁷ 사회구성원의 변화와 연동하여 국민적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유혹이 늘어나게 되고, 흩어진 공동체 소속원을 민족 단위로 재구성하고 결합하려는 민족주의적 어필의 유혹이 늘어나게 되었다.¹⁸

3. 민주당 정권의 실패와 자민당 우위체제로의 전환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대변혁과 제도개혁들은 개별 행위자나 특정 정당과는 무관하게 가치중립적으로 작용하는 장기적 패턴의

16 김현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성장시대, 기적의 돌파전략』, 다산북스, 2015.

17 田中愛治, 『自民党衰退の構造: 得票構造と政策対立軸野変化』, 読売新聞社世論調査部, 2009.

18 大嶽秀夫, 『日本型ポピュリズム』, 中公新書, 2003.

변화였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자민당의 위세를 누르고 2009년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달성한 민주당에게 성공의 원인보다 실패의 조건으로 작용했던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민주당 정권의 실패는 자민당의 정권 복귀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실패의 피드백 효과는 자민당 장기집권의 반면교사로 작용했다. 아베의 정책 비전과 정치적 열망은 민주당 정권 실패의 반사효과였다.

1) 민주당의 실패와 리버럴의 고립

2009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고이즈미 정권 이래 미일동맹 강화 일변도였던 자민당 노선의 안티테제로서 대등한 미일 관계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내세웠다.¹⁹ 하토야마 총리는 대등한 미일 관계의 상징으로 오키나와현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국외 또는 현외(県外)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권은 후텐마 기지를 대체할 기지를 찾지 못함으로써 미일 관계만 손상시킨 채 수상(총리)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추진한 또 하나의 간판 외교정책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었다. 자민당 고이즈미 총리가 약화시켜 놓은 아시아 외교의 복원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을 안정시킨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하지만 일본의 희망과는 반대로 중국 어선이 2010년 9월 센카쿠(尖閣)에 상륙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체포한 어민들을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석방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으로부터 ‘외교패배’(外交敗北)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2010년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위안부문제도 동아시아에 우호적인 외교정책 실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부수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민주당도 간 총리 시절 후반부터 미일동맹을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삼는다는 자민당의 노선을 채택할 수

19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박철희,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 한국 등 아시아의 이웃을 끌어안으려던 리버럴의 시도가 실패로 점철되고, 자민당 내 보수우파들에게 공격 재료만 안겨준 결과가 된 것이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47년에 걸친 일본의 경제 대국이라는 자신감을 좌절감으로 바꾸는 순간이었다. 그다음 해인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역대 최강의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가져오면서 일본인들의 폐쇄감과 침체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자존감의 상실, 국내적 폐쇄감의 증대는 결국 울적한 일본인들의 민족 자존심을 자극하는 재료가 되었다. 이른바 ‘마음을 달래기 위한 내셔널리즘’이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리버럴한 성향의 민주당 정권은 보수파들의 비판에 더욱 노출되었다.²⁰

민주당 정권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재촉한 것은 소비세 인상 조치였다. 민주당 정권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표어하에 사회복지를 내실화하는 각종 무상 복지혜택을 남발했는데, 여기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었다. 초기에는 ‘사업 재분류’(事業仕分け) 등 예산 절약과 낭비 없애기로 대응하려 했으나, 결국 재원의 고갈로 인해 소비세를 10%로 올리겠다는 조치를 내놓았다. 민주당 내부가 분열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인기도 급전직하로 낮아져서 2012년 총선에서 초라하게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포퓰리즘적인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적 인기를 끌었지만, 총리관저가 주도하는 소비세 인상이 결국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것이다. 근로자와 복지를 중시한다는 리버럴의 이상적 공약이 조세 조항에 직면하면서 자민당 복권의 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20 小熊英二·上野陽子, 『癒しのナショナリズム』,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3.

2) 아베의 보수적 대안 제시

아베의 복권에 가장 공헌한 것은 안보 면에서 ‘미일동맹의 글로벌화’였고, 경제 면에서는 ‘아베노믹스’를 통한 성장동력 마련이었으며, 이념 면에서는 ‘강한 일본’을 되찾아오겠다는 민족주의의 부활이었다. 복고적인 민족주의와 적극적 국제주의의 교묘한 결합을 통해 일본의 국운 상승을 시도한 것이다. 3·11 이후 가라앉고 있는 일본의 자신감을 되살려 ‘강한 일본을 되찾아 오겠다’(強い日本を取り戻す)는 호소는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06년 아베가 그린 일본의 미래상이 일본의 전통적인 역사, 자연, 전통, 문화 등에 기반을 둔 ‘아름다운 나라’(美しい国)였다면,²¹ 2012년 그가 그린 일본의 미래상은 ‘새로운 일본’(新しい日本)이었으며 이는 곧 ‘강한 대국 일본’이었다.²²

아베가 그린 강한 일본의 이미지는 세 가지 모습으로 연상된다. 첫째, 인구의 축소와 경제침체로 쇠퇴하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21세기에도 세계 경제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는 ‘강인한 나라 일본’이다.²³ 둘째, 중국이나 한국 등 주변국의 사죄나 반성 요구에 쉽사리 허리를 굽히지 않는, 당당하게 ‘주장하는 나라 일본’이다. 셋째, 일본이라는 국경의 테두리에 얽매어서 세계의 제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한 발 물러선 소극적 국가가 아니라, 국제평화와 초국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나라 일본’이다.

이와 같은 이념의 골격은 아베 총리가 소속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던 ‘일본회의’의 사상적 기초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일본회의는 천황제의 존중과 국격의 확립, 국력의 향상 등 복고적 민족주의를 통해 일본의 부활을 꾀하는 동시에, 역사와 영토 교육을 통해 일본 국민들의 자존감을 확립하려는 신보수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²⁴ 일본회의의 ‘복고적 민족주

21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文春新書, 2006.

22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文春新書, 2013.

23 五百旗頭真, 『日本は衰退するのか』, 千倉書房, 2014.

24 青木理, 『日本会議の正体』, 平凡社新書, 2016; 菅野完, 『日本会議の研究』, SPA! BOOKS 新書, 2016; 俵義文, 『日本会議の全貌』, 花伝社, 2016.

의'(復古的 民族主義)에 아베 나름의 '적극적 국제주의'(積極的 國際主義)를 합한 모습이 아베 시대 보수의 실체였다. 전자는 자주국가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원과 견제를 많이 담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국제문제에 대한 주도적 적극적 관여와 참여, 미일동맹 강화 등 보통국가론의 요소를 담고 있다.²⁵

3) 보수적 정치기반의 확장과 공고화

아베 중심의 자민당이 장기정권을 담보하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민주당의 분열과 왜소화였다. 55년 체제하에서 자민당이 중도와 혁신으로 나뉘어 내부 대립하던 일본 야당들의 덕으로 자민당 우위체제를 유지했듯이, 아베 시대 자민당 우위체제의 가장 큰 공헌자는 일본의 야당 세력이었다. 끝을 모르는 분열과 내부 대립은 아베 시대 자민당 우위 확보를 아주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자민당 지지에 비교적 안정된 항상성(恒常性)을 제공해 준 것은 공명당(公明黨)과의 협력이었다. 공명당은 아베 시대 자민당 정치에 두 가지 선물을 안겨주었다. 하나는 국정선거에서의 선거협력을 통해 야당을 넘어서는 의석 확보를 가능하게 해 주는 한편, 도시부지역에서 자민당 생존을 연장시켜 주는 생명선 역할을 해 준 것이었다.²⁶ 공명당의 지지가 없다면 40~50석의 자민당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²⁷ 아베 시대 자민당과 공명당의 관계가 결코 찰떡궁합은 아니었지만, 두 정당은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안정된 생존을 위해 전략적인 선거 협력을 흘트리지 않았다. 만약 공명당이 자민당이 아닌 정당과 연합하거나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을 경우, 자민당이 선거 우위를 담

25 전자가 자주국가론자의 논리라면, 후자는 보통국가론자의 논리였다. 자주국가론과 보통국가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Richard Samuels, "Securing Japan: The Current Discourse,"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33(1), 2007, pp. 125~152.

26 Sukeui Sohn, *Electoral Cartel for Domination: LDP-Komeito Cooperation in Urban Districts*, Ph.D. Disser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e 2018.

27 蒲島郁夫·山本耕資, 「連立政権における公明党野選択」, 『世界』 727, 2004, 143~153쪽.

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둘째로 공명당은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의 강경 우파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정책 분야에서의 중도포괄형 여당 이미지를 만들게 해 주었다.²⁸ 자민당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저소득층, 소수자,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 대책을 충실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동맹에 몰입하는 자민당을 대신하여 한국과 중국 등 걸그러운 이웃 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는 모습은 자민당 권력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1955년 체제하의 자민당이 내부적으로 백화점식 ‘포괄정당’(catchall party)이었다면, 아베 시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은 자민당 외부에 존재하는 ‘중도포괄형(中道包括型) 정당 연합’ 구축이었다. 선거 정치와 정책 양면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서로의 약점을 상쇄해 주는 ‘보완재’(補完財)였다.

공명당이 연립 여당의 일부로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다면, 2011년 탄생한 ‘일본유신의 회’(日本維新の会)는 아베가 추진하는 보수우파적인 정책 아젠다를 함께 밀고 나가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유신의 회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후루야 게이시(古屋圭司) 등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우파가 독립하여 만든 정당이었다. 자민당과 공식적인 연립을 구성하지 않았던 관계로 야당의 지위에 있기는 했지만, 일본유신의 회가 담당한 가장 큰 역할은 일본 정계 내 혁신 야당들의 진보적 아젠다들에 대한 안티테제 제공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반사회주의적,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띤 일본유신의 회는 사회당, 공산당 등 혁신 정당들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벽을 만드는 동시에, 중국이나 한국 등 과거사 문제로 일본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일본의 독자적인 운신의 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떠맡았다. 일본 정계에서 처음으로 자민당보다 더 우파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28 Sukeui Sohn, "Checking and Supplementing the Dominant Player: LDP-Komeito Relations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SNU IIA Global Excellence Seminar 발표논문(2021년 4월 2일).

등장한 일본유신의회는 겉으로는 야당이었으나 실제로는 자민당의 우호 세력이었다. 또한 이들의 존재와 거친 주장은 자민당 내부에서 세이와카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우파들이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외부 도우미’ 역할도 수행했다. 아베, 아소,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등 일본회의에 친근감을 가진 정치가들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배경에는, 일본회의나 일본유신의회와 같은 외부 동조세력의 보이지 않는 도움도 있었다.

아베 시대 보수지배 기반의 공고화 양상은 마치 ‘오른손에 일본회의(右手に日本会議), 왼손에 창가학회(左手に創価学会)’를 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1955년 체제하에서는 자민당 내부가 보수 우파, 보수 중도, 보수 리버털로 나뉘어 권력을 분점하거나 타협하는 구조로 정권을 이끌어 왔다면, 아베 시대에는 보수 중도의 역할을 자민당 외부의 연립 정당인 공명당이 담당하고, 보수 우파의 역할을 일본유신의회가 간접적으로 맡는 ‘확장된 보수 진영’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일본 정계에서 보수세력의 총합이 확장된 양상이며, 총체적으로 자민당이 중심에 선 보수 중심 정치가 재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민당 우위체제라는 외형적 복원에 그치지 않고, 보수 이념과 정치세력의 전면적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관저주도 강화를 통한 ‘탈전후’의 가속화

‘강한 대국 일본의 부활’을 모토로 내건 아베 총리는 본격적으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시도했다. 전후체제로의 종결산을 주장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시대의 이념에서 더 나아가 일본의 새로운 국가전략 정체성(national strategic identity)에 기반한 대전환을 시도한 것이다.²⁹

29 국가전략정체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Cheol Hee Park, “National Identities and South Korea-

1) 요시다 독트린의 대전환

아베 총리가 설정한 ‘강한 대국 일본’의 추구는 1955년 체제하에서 보수본류(保守本流) 노선이라고 불리는 요시다 독트린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었다. 우선, 미소 냉전 상태에서 미국과 단독강화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소련이 아닌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의 지원자(supporter) 역할을 하는 것이 주였던 요시다 노선과 달리,³⁰ 아베 노선은 미국과의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양상이었다. 미국의 클라이언트(client)가 아니라 파트너(partner)라는 점을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구상들을 구체화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2006년 아베 총리가 처음 외교적으로 공식화시켰다가 2007년 수상(총리)직에서 사임한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다시 수상직에 돌아온 후 구체화하여 2016년 공식적으로 일본의 외교 독트린으로 발표했다.³¹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국제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다.³² 또한 2012년 아베 총리가 ‘아시아 다이아몬드 안보 링크’(Asia Diamond Security Link)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 해양민주주의국가 연대 구상은 아베 총리 시절 미국과 함께 쿼드(Quad)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³³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질서를 측면에서 지지하는 중견국 외교 또는 미들파워 외교(middle power diplomacy)로부터 벗어나 대국 외교(great power diplomacy)를 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³⁴

Japan Relations,” in Gilbert Rozman, ed., *National Identities & Bilateral Rela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45~64.

30 Takashi Inoguchi, “Japan’s Images and Options: Not a Challenger But a Supporter,”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2(1), Winter 1986, pp. 95~119.

31 Yuichi Hosoya, “FOIP 2.0: The Evolution of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sia-Pacific Review* 26(1), May 2019, pp. 18~28.

32 Lindsey For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Brookings Institution Report*, May 2020.

33 Shinzo Ab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2.

34 미들파워 외교에 대해서는 소에야 요시히데, 박철희·윤수경·이나을 옮김,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 오름, 2006.

요시다 독트린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면서 군사 대국이 아닌 무역과 통상을 통한 경제 대국으로 국제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을 꿈꾸었다. 반면, 아베 시대의 일본은 정치 외교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를 주도하고, ‘지구본을俯瞰하는 외교’(地球儀を俯瞰する外交)를 통해 일본의 외교활동 범위를 지구 전체로 넓혀 가는 전방위 외교로 전환했다.³⁵ 국제사회에서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가급적 회피하면서 비군사적, 인간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지원활동을 통해 평화를 진작하려던 전후 일본의 모습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2015년에는 안보법제의 통과에 이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함으로써 미국이 제3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는 공동대처하겠다는 방식으로, 일본이 국제안보 면에서 더 이상 소극적인 후방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면에 나설 수 있음을 표방한 바 있다.

요시다 노선의 또 다른 축은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을 존중하여 경무장 노선을 견지하고 전수방위에 걸맞은 방위태세를 갖추으로써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힘의 공백’(power vacuum)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방위력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베 노선은 일본의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아베 총리는 먼저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작성했고, 이에 맞추어 일본에게 위협이 가해졌을 경우 자위대의 대응 태세를 상세하게 규정한 방위 법제들을 체계화했다. 직접 무력 공격 사태, 존립 위기 사태, 중요 영향 사태라는 세 가지 범주의 확립은 일본이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본의 영토나 근해에 한정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방위 태세를 적극적으로 갖추겠다는 구상이다.³⁶ 이에 따라 방위비를 증강하고 남서쪽 도서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

35 박철휘, 「아베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박철휘 엮음, 『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5~34쪽.

36 송화섭, 「일본안보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박철휘 엮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17~139쪽. 황세희, 「전쟁 가능한 일본을 향한 안보정책 전환」, 박철휘 엮음

적 역량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수방위를 넘어서서 적극적 방위(proactive defense)를 추구하는 자세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공백 방지’를 넘어서서 ‘힘의 균형’(power balance) 전략으로 이행했음을 보여 준다.

요시다 독트린으로부터의 전환은 전후체제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전전체제로 복귀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후체제가 가진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새로운 국가전략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였다.

2) 국제 안보의 내재화: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

아베 총리 시절 총리관저의 주도하에 많은 변혁들이 추진되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나타났다.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주도적 구상은 ‘적극적 평화주의’(積極的 平和主義)의 추진이었다.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공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혁신 정치세력이 호헌주의에 입각하여 지키려고 하는 평화주의, 즉 ‘일국 평화주의’(一國 平和主義)에 대한 안티테제다. 일본의 평화유지 우선과 평화헌법이 규정한 방식에 의한 세계평화 노력, 즉 비군사적 평화 공헌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는 전후체제의 구상과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우선, 국제 평화와 일본의 평화에 직결된다는 사고방식의 정립이다. 역으로 말하면 국제 안보(international security)가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의 중요한 사태나 사건의 발생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일본 자체의 존립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안보법제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사태 발전을 일본의 안보와 직결시킨 점에서 이전의 후방지원형 관여와 다르다.

둘째, 국제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출선해서 나서겠다는 점이 주목할

음, 『아베시대의 국가전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79~210쪽.

만하다. 국제사회의 요청 또는 압력이 있을 경우 국내적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지구본을 부담하면서 분쟁지역이나 불안정지역에 대한 관여에 발을 빼지 않겠다는 자세다.³⁷ 셋째,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나 평화적 공헌을 판단하겠다는 것도 진부해 보이지만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미국 등 동맹국이나 우호국의 입장을 먼저 따져 보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일본의 국익을 판단의 최우선적 근거로 삼겠다는 방식이다. 외압에 대한 대응이나 책임 떠넘기기식 외교를 지양하고,³⁸ 전략적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³⁹ 이 같은 방식은 전후체제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적응전략’(coping strategy)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⁴⁰

아베 총리가 주도한 전후체제 탈각 움직임의 대표작은 아마도 ‘집단적 자위권’(集團的 自衛權)의 용인일 것이다.⁴¹ 일본은 종래 ‘집단적 자위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이 있는 관계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실상 해석 개헌(解釋改憲)을 시도했다.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이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제3국에 의해 위협이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자면, 일본의 영토가 직접 무력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미국 등 동맹국이 중국이나 북한 등 제3국에 의해 공격이나 위협을 당할 경우 일본도 함께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37 이의 원형은 아소(麻生) 외상의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에서 찾을 수 있다. 麻生太郎, 『自由と繁栄の弧』, 幻冬舎, 2007.

38 Jennifer Lind, “Pacifism or Passing the Buck?: Testing Theories of Japanese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9(1), Summer 2004.

39 兼原信克, 『戰略外交原論』, 日本經濟新聞社, 2017.

40 제럴드 커티스는 냉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특징을 ‘적응(coping) 전략’으로 보고 있다. Gerald Curtis, “Introduction,” in Gerald Curtis, ed.,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Change*, New York: M.E. Sharpe, Inc, 1993, pp. xv~xxvi.

41 박철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은 미국이 동아시아지역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철수하여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일본이 미국의 지역에 대한 관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도 지니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전수방위나 비핵 3원칙 등 종래의 일본 방위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현상 유지에 가까운 변화라고 해석한다.⁴² 그러나 일본의 직접 공격에 대한 방위를 넘어서는 영역 방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전수방위에 충실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중국이나 한국의 진보세력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한 일탈로 규정한다.⁴³ 하지만 위험한 일탈이라는 해석은 일본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것으로, 일본 안보 법제에 의해 권한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국회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약을 도외시한 해석이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따라 무력 행사를 용인하면서 자민당과 여당은 세 가지의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위협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차대한 것일 것, 무력사용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무력 사용 시에는 최소한의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것 등이며, 국회의 동의를 받을 의무도 추가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약을 들어 전수방위를 벗어나더라도 기존 접근법에서 아주 제한적인 변화에 그치며, 진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다.⁴⁴

하지만, 휴즈(Hughes)와 같이 이들 세 가지 요건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42 일본 방위성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위권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행사를 뒷받침하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가지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헌법의 아래 전수방위를 우리나라 방위의 기본적 방침으로 하고 실력조직으로서의 자위대를 가지고 이 준비를 추진하면서 운용을 기해 왔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내 ‘헌법과 자위권’에 관한 기술.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kihon02.html>(최종검색일: 2021. 5. 25.).

43 서재정,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전쟁하는 미국」, 『한겨레신문』, 2015. 9. 30.

44 Jeffery Hornung & Mike Mochizuki, “Japan: Still an Exceptional U.S. Ally,” *The Washington Quarterly* 39(1), 2016, pp. 95~116. Adam Liff, “Japan’s Defense Policy: Abe the Evolutionary,” *The Washington Quarterly* 38(2), 2015, pp. 79~99.

재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며, 상황의 발전과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근본적인 이행(radical shift)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⁴⁵ 일본이 설정한 제약이 ‘이빨 빠진 제지’(toothless hadome)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처럼 세우려 해도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다. 기본적으로 엄격한 제약조건을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상황에서는 유동적인 요소와 자의적 판단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후체제로부터의 근본적인 탈각이었다.⁴⁶

집단적 자위권 용인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도 전후체제와는 다른 면이 있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 일체화’다. 미국과 안보 이익을 공유하면서 일심동체로 움직이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지역에 대한 ‘깊은 관여’(deep engagement)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맹의 글로벌화’를 의미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황적인 개념이며 특정 지역에 지리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구 어디에서도 미국이라는 동맹국과 함께 움직인다는 글로벌 관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3) 아시아의 타자화

아베 시대에 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은 ‘아시아의 타자화’다.⁴⁷ 1955년 체제에 체화된 전후 일본은 2차대전 이전에 일으킨 침략전쟁이나 주변국의 식민지화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깊은 사죄에 기초하고 있다. 전쟁과 식민지가 주변국에게 심대한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안겼다는 회한과 반성에 기초하여 아시아와의 재결합을 추진해 온 것이 전후 일본의 모습이었다. 이른바 ‘회한공동체’(悔恨共同体)를 중심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신중하고 성찰적인 접근이 일본의 대외 접근을 용이하

45 Christopher Hughes, “Japan’s Strategic Trajectory and Collective Self-Defense: Essential Continuity or Radical Shift?,”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43(1), Winter 2017, pp. 93~126.

46 朴喆熙, 「集團의自衛權をめぐる言説」, 『東京新聞』, 2013. 11. 3.

47 오승희,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 박철희 엮음, 『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211~236쪽.

게 해 왔던 것이다.⁴⁸ 이러한 의식은 비단 사회당 공산당과 같은 진보혁신 정당이나 공명당과 같은 중도정당은 물론 자민당 의원들에게도 공통적인 인식의 기반이었다. 1993년 고노 담화(河野談話), 1995년 무라야마 담화(村山談話), 1998년 김대중-오부치(金大中·小淵) 공동선언, 2010년 간 담화(菅談話) 등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베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반리버럴리즘’(反リベラリズム)의 기치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사죄와 반성의 회한공동체로부터 의식적으로 이탈하겠다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중국과 한국 등 이웃나라를 점점 타자화하면서 일본의 자존심과 자긍심 고양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아베의 자세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5년 발표된 전후 70주년 기념 ‘아베 담화’(安倍談話)였다. 이 담화에서 아베는 러일전쟁 승리에 대한 열강과 약소국의 축하를 언급한 이후 한국의 강제병합 부분을 건너뛰어 바로 1931년 만주사변으로 넘어간다.⁴⁹ 한국의 식민지화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베는 일본의 자세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점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침략과 전쟁, 무력 위협과 행사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일본이 개방적 경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개념 아래 대외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전쟁 기간 중 많은 여성이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역사를 헤아려 일본인은 지난 역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미래로 나가겠다.⁵⁰ 그렇게 밝히면서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해 더 이상의 사죄와 반성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무라야마 총리나 간 총리 시대의 역사관에서 상당히 퇴행한 것이었다.

48 회한공동체라는 개념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사용한 개념이었다. 회한공동체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는, 坂本多加雄, 『知識人』, 讀賣新聞社, 1996, 248쪽.

49 아베 담화의 국제적 요소에 대해서는 이정환, 「아베정권 역사정책의 변용: 아베 담화와 국제주의」, 『아시아리뷰』 9권 1호, 2019. 8., 179~205쪽.

50 정재정, 「한일역사문제의 극복방향」,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 토론회 한일미래비전위킹그룹 발표문, 2021년 4월 23일.

아시아의 타자화를 가장 깊숙이 밀고 나간 것이 중국 견제(balancing China)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이 동아시아공동체를 언급하면서 중국도 끌어안고 가겠다는 전략을 구상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정반대의 전략을 구상한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쿼드 등은 아시아 외부의 해양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계하여 중국의 팽창과 공세적 외교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이유로 핵심적 협력 파트너로 포섭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시아로부터의 탈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의 타자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전후체제가 그랬던 일본의 모습과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아베 이후의 아베 노선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지배하의 일본이 탈전후로의 전환 시대를 열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국가전략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여 요시다 독트린의 전면적인 수정을 통해 아베 노선을 정착시켰다. ‘강한 대국 일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 안보를 내재화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타자화시키면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추진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베 시대의 일본이 전후체제를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은 분명히 근본적인 변화였지만, 전후 체제의 탈각이 총체적이고 전면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후 체제의 근간인 평화헌법은 개헌 시도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법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 남아 있다. 해석개헌이 종종 시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평화 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정치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전후체제를 뒷받침했던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지켜 가고 있다. 미일동맹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보다는 동맹을 강화하고 일체화하려는 시도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에 점점 예속되어 간다는 ‘영속패전론’(永

統敗戰論)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맹 영속화’(同盟永統化)의 움직임이 여전히 강하다.⁵¹ 아울러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개방적 연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비군사적 인간안보 분야의 공헌도 여전히 일본 외교의 핵심적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 전전(戰前) 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탈전후를 향한 부단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으로 복귀하려 한다는 조짐은 없다.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관여를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패권 국가나 군국주의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국제적으로 군사적 패권을 손에 넣기에는 현실적 한계들이 적지 않다.⁵² 일본이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버금가는 패권 국가로 성장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베 시대에 일어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 일본 의회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정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도 착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탈법적 국가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다. 나아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유 통상질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도 폐쇄적 민족주의의 길과는 다른 선택이다. 일본이 독자적인 폐쇄적 세력권을 구축하려는 증거는 없으며, 사실상 일본 혼자의 힘으로 이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전전 일본의 군국주의나 패권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시대 ‘탈전후화’의 진전은 부정적인 측면을 상당히 남겨 놓았다. 우선,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은 견제 세력을 무시한 힘의 일방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권력의 사물화(私物化)’를 가져왔다. 가계학원(加計學院)에 대한 권력유착형 지원,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

51 白井聡, 『永統敗戰論』, 太田出版, 2013.

52 Takashi Inoguchi & Paul Bacon, “Rethinking Japan as an Ordinary Country,” in G. John Ikenberry & Chung-In Moon, eds.,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 2008, pp. 79~98.

회)에 선거구 지지자들을 공금을 통해 동원한 것 등은 대표적인 예다. 또한, 관료 집단을 효과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한 것도 아베 시대의 그림자다. 한국어로 ‘알아서 긴다’로 해석되는 ‘손타쿠’(忖度)가 관료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진 것은 좋은 예다. 나아가,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심화된 것은 탈전후화가 가져온 그들에 해당한다. 전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반성을 거부함으로써 잠재적 협력국마저도 타자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일본 외교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부터의 관심은 과연 아베가 추진했던 새로운 국가전략 정체성 전환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일 것이다.

미래를 가늠할 길은 없지만 향후 주목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정치적 흐름은 존재한다. 먼저, ‘아베 없는 아베 노선’(Abe's Policy Line without Abe)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이다. 탈전후의 흐름을 주도한 것은 아베였고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은 제도적 요인과 속인(屬人)적 요인의 결합에 있었다.⁵³ 제도적 여건은 그대로 남겠지만, 아베 개인의 정치적 자질은 그대로 재생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일본 현대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자민당 총리의 장기집권 후에는 불안정기가 상당 기간 존재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토 정권 이후 5대 파벌의 격렬한 각축, 나카소네 정권 이후 자민당 부패와 분열의 가속화, 그리고 고이즈미 정권 이후 1년짜리 수상의 교대 등은 반면교사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리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야당의 점진적인 결집이다. 민주당의 쓰라린 패배 이후 일본 야당들은 이합집산을 계속하면서 분열을 넘어서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1995년 신진당의 해체 이후 2003년 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이 이루어지기까지 8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을 연상시킨다. 소

53 内山融, 「歴代最長「安倍政権」7年8か月のレガシーは何か?」, *Yahoo News*, 2020. 8. 29. <https://news.yahoo.co.jp/articles/fad69d43cba257fdf3369e83edb9364b7cde609e>(최종검색일: 2021. 4. 19.).

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하에서 야당의 분열은 자민당의 권력 장기화를 도와줄 뿐이고 야당은 ‘함께 넘어지기’(とも倒れ)를 계속하게 됨으로써 생존 전략과는 역방향 질주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야당들의 통합과 선거 협력의 추세가 진전된다면 새로운 정치적 역학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국민들의 민심도 한곳에 머물러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한 방향을 향해 단선적으로 계속 나아간다고 보는 시각은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인 관측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투고일자: 2021. 5. 27. | 심사완료일자: 2021. 6. 13. | 게재확정일자: 2021. 7. 5.